현안과제연구

2010.06

2010 충청남도 고용수요 전망 및 정책방향

연구수행 : 신동호

CDI 충남발전연구원

현안과제연구
2010. 6.

2010 충청남도 고용수요 전망 및 정책방향

연구수행 : 신동호

목 차

Ⅰ. 서론 ·····1

Ⅱ. 고용동향 및 노동전망 ·····2

Ⅲ. 국내외 고용정책 동향 및 시사점 ·····14

Ⅳ. 충남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42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론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촉발된 도내 실물경제의 급격한 침체는 생산 둔화 및 이에 따른 노동수요의 급감을 야기한 바 있음

- 이러한 고용사정의 악화는 경기침체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도내 경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고용흡수력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최근의 경기회복과 병행한 고용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다시 말해,'고용 없는 회복(Jobless recovery)'에 대한 우려가 대두될 수 있음

- 즉, 최근 정부의 경기부양과 재고조정 효과 등의 효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노동시장의 회복세는 경기회복세에 비해서는 미미한 실정임

○ 더욱이 경기침체기에 발생된 실업자의 상당수가 공공부문에 집중 흡수되어 경기회복이 지속되더라도 고용회복 속도는 느려질 가능성도 상존함

- 또한 최근의 경기회복은 수출부문이 주도한 것으로, 수출주도의 경기회복이 지속된다면 고용 회복속도는 더욱 느려질 것으로 전망됨

○ 이처럼 최근의 고용문제는'노동수요의 부족 문제'로 노동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경제•산업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즉, 고용회복을 위해서는 민간으로부터의 고용수요를 통한 일자리 창출력 회복이 시급함

○ 이러한 현실적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2010년도 충남의 고용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노동수요 측면에서 고용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되, 노동공급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진입과 재진입을 진작하는 방안을 충남도 차원에서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충남의 고용동향 및 특성을 분석함과 동시에 2010년도 고용전망을 살펴봄
- 또한 국내외 고용정책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충남의 고용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Ⅱ. 고용동향 및 노동전망

1. 전국 고용동향

○ 2009년 경제활동인구는 24,394천명으로 전년대비 48천명(0.2%) 증가, 경제활동참가율은 60.8%로 전년대비 0.7%p 하락

○ 취업자는 23,506천명으로 전년대비 72천명(−0.3%) 감소

- 50대 이상은 증가한 반면, 40대 이하는 감소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48천명, 4.6%)에서 증가
- 임금근로자(247천명, 1.5%) 중 상용근로자(383천명, 4.3%)의 증가가 두드러짐

○ 고용률(취업인구비율)은 58.6%로 전년대비 0.9%p 하락

○ 실업자는 889천명으로 전년대비 119천명(15.5%) 증가

○ 실업률은 3.6%로 전년대비 0.4%p 상승

- 청년층 실업률은 8.1%로 전년대비 0.9%p 상승

○ 비경제활동인구는 15,698천명으로 전년대비 447천명(2.9%) 증가

- 가사(148천명, 2.7%), 쉬었음(123천명, 9.1%)에서 주로 증가

<표 1> 2009년 고용동향

(단위 : 천명, %, %p, 전년대비)

	2007	2008	2009	2008		2009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 15세이상인구	39,170	39,598	40,092	428	1.1	495	1.2
▣ 경제활동인구	24,216	24,347	24,394	131	0.5	48	0.2
(참가율)	(61.8)	(61.5)	(60.8)	(−0.3p)		(−0.7)	
┌ 남 자	14,124	14,208	14,319	84	0.6	111	0.8
│ (참가율)	(74.0)	(73.5)	(73.1)	(−0.5p)		(−0.4)	
└ 여 자	10,092	10,139	10,076	47	0.5	−63	−0.6
(참가율)	(50.2)	(50.0)	(49.2)	(−0.2p)		(−0.8)	
○ 취 업 자	23,433	23,577	23,506	145	0.6	−72	−0.3
고 용 률	59.8	59.5	58.6	−0.3p		−0.9p	
┌ 농림어업	1,723	1,686	1,648	−37	−2.1	−38	−2.2
├ 광공업	4,031	3,985	3,859	−45	−1.1	−126	−3.2
│ ·제조업	4,014	3,963	3,836	−52	−1.3	−126	−3.2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7,679	17,906	17,998	227	1.3	93	0.5
·건설업	1,849	1,812	1,720	−37	−2.0	−91	−5.0
·도소매·음식숙박업	5,722	5,675	5,536	−47	−0.8	−139	−2.4
·전기·운수·통신·금융	2,773	2,786	2,761	13	0.5	−25	−0.9
·사업·개인·공공서비스	7,336	7,633	7,981	298	4.1	348	4.6
┌ 상용근로자	8,620	9,007	9,390	386	4.5	383	4.3
├ 임시근로자	5,172	5,079	5,101	−93	−1.8	22	0.4
├ 일용근로자	2,178	2,121	1,963	−57	−2.6	−158	−7.4
├ 자영업자	6,049	5,970	5,711	−79	−1.3	−259	−4.3
└ 무급가족종사자	1,413	1,401	1,341	−13	−0.9	−60	−4.2
○ 실 업 자	783	769	889	−14	−1.7	119	15.5
실 업 률	3.2	3.2	3.6	0.0p		0.4p	
┌ 남 자	517	505	584	−12	−2.4	80	15.8
│ 실업률	3.7	3.6	4.1	−0.1p		0.5p	
└ 여 자	266	265	304	−1	−0.5	40	15.0
실업률	2.6	2.6	3.0	0.0p		0.4p	
┌ 중졸이하	119	118	130	−1	−0.8	12	10.1
│ (실업률)	(2.1)	(2.2)	(2.5)	(0.1p)		(0.3p)	
├ 고 졸	389	384	437	−5	−1.3	54	14.0
│ (실업률)	(3.8)	(3.8)	(4.4)	(0.0p)		(0.6p)	
└ 대졸이상	275	268	321	−7	−2.7	54	20.0
(실업률)	(3.2)	(3.0)	(3.5)	(−0.2p)		(0.5p)	
▣ 비경제활동인구	14,954	15,251	15,698	297	2.0	447	2.9

자료: 통계청(http://kostat.go.kr)

2. 충남 고용동향 및 특성

1) 고용동향

○ 15세 이상 인구는 1,588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24천명(1.5%) 증가한 반면, 경제활동인구는 991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5천명(0.5%) 감소하여 경제활동참가율도 62.4%로 전년에 비해 1.3%p 감소

○ 취업자는 961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12천명(1.2%) 감소하였으며, 고용률도 1.7% 감소

- 20-39세는 감소한 반면, 40-59세는 증가. 특히 20대의 취업자 감소(4.4%)와 50대의 취업자 증가(6.3%)가 두드러짐
- 산업별로는 농림어업(4.7%)과 광공업(3.0%), 제조업(3.6%)은 타 산업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건설업(1.8%)과 전기운수통신금융(1.1%)은 다소 증가
- 상용근로자(5.3%)와 무급가족종사자(1.1%)는 증가, 임시근로자(7.5%)와 일용근로자(14.0%), 자영업자(2.0%)는 감소

○ 직업별 취업자의 전년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사무종사자(125천명, 0.08%)는 증가한 반면, 전문·기술·행정관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종사자는 감소

○ 실업자는 29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5천명(20.8%) 증가하였으며, 실업률도 2008년 2.4%에서 3.0%로 상승

- 남자 실업자수는 29천명(42.9%)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여자 실업자수는 9천명(10.0%)으로 감소

○ 비경제활동인구는 597명으로 전년에 비해 29천명(5.1%) 증가

<표 2> 2009년 충청남도 고용동향

(단위 : 천명, %, %p, 전년대비)

	2007	2008	2009	2008		2009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 15세이상인구	1,547	1,564	1,588	17	1.1	24	1.5
▣ 경제활동인구	1,021	996	991	−25	−2.4	−5	−0.5
(참가율)	(66.0)	(63.7)	(62.4)	(−2.3p)		(−1.3)	
┌ 남 자	587	578	585	−9	−1.5	7	1.2
│ (참가율)	(77.6)	(75.2)	(74.6)	(−2.4p)		(−0.6)	
└ 여 자	435	418	406	−17	−3.9	−12	−2.9
(참가율)	(55.0)	(52.6)	(50.5)	(−2.4p)		(−2.1)	
○ 취 업 자	998	973	961	−25	−2.5	−12	−1.2
고 용 률	64.5	62.2	60.5	−2.3p		−1.7p	
┌ 농림어업	219	190	181	−29	−13.2	−9	−4.7
├ 광공업	170	169	164	−1	−0.6	−5	−3.0
│ ·제조업	168	169	163	1	0.6	−6	−3.6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610	613	616	3	0.5	3	0.5
·건설업	66	55	56	−11	−16.7	1	1.8
·도소매·음식숙박업	201	188	188	−13	−6.5	0	0.0
·전기·운수·통신·금융	85	92	93	7	8.2	1	1.1
·사업·개인·공공서비스	258	278	279	20	7.8	1	0.4
┌ 상용근로자	318	342	360	24	7.5	18	5.3
├ 임시근로자	146	147	136	1	0.7	−11	−7.5
├ 일용근로자	107	93	80	−14	−13.1	−13	−14.0
├ 자영업자	325	296	290	−29	−8.9	−6	−2.0
└ 무급가족종사자	103	95	96	−8	−7.8	1	1.1
○ 실 업 자	23	24	29	1	4.3	5	20.8
실 업 률	2.2	2.4	3	0.2		0.6	
┌ 남 자	14	14	20	0	0.0	6	42.9
│ 실업률	2.3p	2.4p	3.5p	0.1		1.1	
└ 여 자	9	10	9	1	11.1	−1	−10.0
실업률	2.2p	2.3p	2.3p	0.1		0	
▣ 비경제활동인구	526	568	597	42	8.0	29	5.1

자료: 국가통계포탈(http://www.kosis.kr/)

2) 고용특성[1)]

○ 경제활동참가율

- 시지역에서 최저 49.9%~최고 64.2%, 군지역에서 55.6%~ 70.6%의 범위를 보임
- 시지역에서는 아산시(64.2%), 서산시(64.1%), 논산시(63.7%) 등이, 군지역에서는 청양군(70.2%), 태안군(70.5%), 당진군(68.3%) 등이 높았음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시지역에서는 논산시가 55.1%, 군지역에서는 청양군이 61.7%로 높았음

○ 고용률

- 시지역에서 48.2%~62.5%, 군지역에서 53.8%~69.5%의 범위를 보임
- 시지역에서는 아산시(61.9%), 서산시(62.3%), 논산시(62.5%) 등이, 군지역에서는 청양군(69.3%), 태안군(69.5%), 당진군(67.1%)등의 순으로 나타남
- 취업자 수는 시지역에서는 천안시가 242천명, 군지역에서는 당진군이 72천명으로 가장 많았음

○ 취업률

- 시지역에서는 아산시(3.5%), 계룡시(3.2%) 등이 높았음
- 실업자수는 천안시(8천명), 아산시(4천명), 서산시(2천명) 등이 많았음

○ 타지역으로 통근자

- 타지역 통근자 비중은 계룡시가 43.5%로 가장 높았으며, 주된 통근지는 대전시로 나타났음

○ 대졸이상 비경제활동인구

- 시지역에서는 계룡시가 23.3%로, 군지역에서는 당진군이 12.3%로 대졸이상 비경제활동인구가 높게 나타났음

1)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2008(2009.4 발표)

3. 노동시장 전망

1) 2010 전국 고용전망

○ 4% 이상의 경제성장에서 경지회복기의 적절한 출구전략 등을 통해 10만 후반 내지 20만 정도의 취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08년 이후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 창출력은 하락세를 보여 '10년에 경기가 회복되어도 취업자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음
- 최근 취업계수는 점차 하락하여 1%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5.5~8.0만 수준

2) 2010 충남 고용전망

<표 3> 2010년 경제활동인구 전망

	2009	2010(전국)			2009	2010(충남)		
	(전국)	상반기P	하반기P	연간P	(충남)	상반기P	하반기P	연간P
생산가능인구 (천명)	40,092	40,364	40,610	40,487	1,588	1,597	1,610	1,604
증감 (천명)	494	400	402	401	24	16	15	16
경제활동인구 (천명)	24,394	24,464	24,731	24,598	991	984	1014	999
증가율 (%)	0.2	0.9	0.8	0.8	−0.5	0.9	1.0	1.0
증감 (천명)	47	218	184	202	−5	9	8	9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15,698	15,899	15,879	15,889	597	612	597	605
증가율 (%)	2.9	1.2	1.4	1.3	5.1	1.0	1.4	1.2
증감 (천명)	447	182	217	200	29	6	8	7
경제활동참가율 (%)	60.8	60.6	60.9	60.8	62.4	61.6	63.0	62.3

주1) P는 전망치
2) 생산가능인구는 15세 이상 인구에서 군인, 재소자 등 제외
3)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은 구직기간 4주 기준
4) 증감의 상·하반기는 전년 동일 시점 반기 대비, 연간은 전년대비 수치

○ 2010년 고용은 내수 경기가 회복되면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을 통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2010년에는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사업들이 축소되면서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창출효과는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표 4> 2010년 취업자 전망

	2009 (전국)	2010(전국)			2009 (충남)	2010(충남)		
		상반기P	하반기P	연간P		상반기P	하반기P	연간P
경제성장률 (%)*	4.9	5.8	3.3	4.5	5.6	6.6	3.8	5.1
취업자 (천명)	23506	23,526	23,903	23,714	961	962	977	970
증가율 (%)	−0.3	0.9	0.8	0.9	−1.2	3.6	3.2	3.6
증감 (천명)	−71	205	201	203	−12	35	34	34
실업자 (천명)	889	939	828	884	29	31	27	29
실업률 (%)	3.6	3.8	3.3	3.6	3.0	3.2	2.8	3.0
고용률 (%)	58.6	58.3	58.9	58.6	60.5	60.2	60.8	60.5
취업계수 (명/10억원)*	22.8	23.7	22.6	23.2	16.7	17.4	16.6	17.0

주1) P는 전망치
2) 실업자는 구직기간 4주 기준
3) 증감의 상·하반기는 전년 동반기 대비, 연간은 전년대비 수치
4) 취업계수는 GDP 10억원당 취업자수(2008년)
5) 고용률 = 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
6) 단, 경제성장률은 2008년 확정치(당해년가격)

○ 경기 회복을 통해 취업자 규모는 2009년에 비해 3.6% 증가하고, 고용률은 60.5%로 전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한 고용분산효과로 2010년에는 5%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이 전망되나 직접적인 고용확대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실업률은 전년과 같은 3.0% 수준이지만, 2009년에는 구직 포기자였던 비경제활동인구가 2010년에는 노동시장으로 편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실업자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2010년 실업대책 강구가 필요

<표 5> 2010년 산업별 취업자 전망

산업	2008	2009	2010P	증감(천명)	증가율(%)
				'09~10	'09~10
계	973	961	970	9	0.9
농업,임업 및 어업	190	181	179	−2	−0.9
광공업	169	164	163	−1	−0.4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613	616	624	8	1.3
도소매음식숙박업	188	188	187	−1	−0.7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278	279	283	4	1.3
전기운수통신금융	92	93	95	2	2.1

주 1) P는 전망치
2) ( )안은 구성비

<표 6> 2010년 충남 직업별 취업자 전망

직업	2008	2009	2010P	증감 (천명)	증가율 (%)
				'09~10	'09~10
계	973	961	970	9	0.9
전문·기술·행정 관리자	133	131	134	3	2.6
사무종사자	117	125	125	0	−0.1
서비스·판매종사자	201	192	194	2	1.0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69	162	158	−4	−2.2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종사자	352	351	354	3	0.8

주 1) P는 전망치
2) ( )안은 구성비

○ 산업별로는 농림어업과 광공업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취업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와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하여 고용확대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정부주도의 일자리 사업 축소로 공공부문 및 사회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증가는 감소하거나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직업별 취업자는 농림어업숙련종사가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사무종사자는 소폭 둔화될 전망이며, 전문기술행정 관리자 경우 취업자와 서비스판매종사자,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3) 충남 구인, 구직, 취업 동향[2)]

○ 2009년 11월 충남의 신규구인인원은 7,254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7.9% 증가하였으며, 신규 구직자수는 5,875명으로 16.6% 증가

○ 취업건수는 1,786건으로 전년동월대비 63.2% 증가하였으며, 취업률은 30.4%로 4.4% 상승하였음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신규구인인원은 상용직에서, 신규구직자는 전 계층에서 증가한 가운데 19세 이하와 60대 이상, 대학원졸 이상에서 크게 증가

2) 워크넷 통계자료, 워크넷 통계자료는 워크넷을 이용한 구인, 구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통계자료가 노동시장 전체의 수급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표 7> 2009년 11월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

(단위 : 명, 건, %, %p, 전년동월대비)

구분	세부항목	신규구인인원1)		신규구직자수		취업건수2)		취업률(%)3)	
		2009년 11월	증감률 (%)	2009년 11월	증감률 (%)	2009년 11월	증감률 (%)	2009년 11월	증감 (%p)
전 체		7254	57.9	5875	16.6	1786	36.2	30.4	4.4
성별	남	-	-	3291	17.3	1100	39.4	33.4	5.3
	여	-	-	2584	15.7	686	31.4	26.5	3.2
종사상 지위별	상시근로 상용직	5499	88.2	4395	-2.9	1386	26.8	31.5	7.4
	상시근로 시간제	275	1.9	83	336.8	15	-6.3	18.1	-66.1
	상시근로 계약직	1424	1.6	225	212.5	157	24.6	69.8	-105.2
	상시근로 무관			1162	178.7	226	197.4	19.4	1.2
	일용직	56	-	10	150.0	2	-	20.0	20.0
연령별	19세 이하	0	-	154	49.5	17	30.8	11.0	-1.6
	20대	884	16.8	1680	3.6	581	30.0	34.6	7.0
	30대	1807	-5.0	1761	26.3	579	44.8	32.9	4.2
	40대	207	-29.8	1108	13.4	349	30.7	31.5	4.2
	50대	30	-44.4	812	17.3	197	37.8	24.3	3.6
	60대 이상	5	66.7	360	42.3	63	53.7	17.5	1.3
	무관	4321	173.3						
학력별	초졸이하	26	-39.5	566	6.6	129	26.5	22.8	3.6
	중졸	325	128.9	552	11.1	160	56.9	29.0	8.5
	고졸	2093	96.7	2799	17.7	889	40.9	31.8	5.2
	전문대졸	365	18.9	961	12.7	318	18.2	33.1	1.6
	대졸	97	32.9	962	26.4	283	38.7	29.4	2.6
	대학원졸 이상	5	-	35	84.2	7	133.3	20.0	4.2
	무관	4343	46.5						
임금대별	50만원 미만	0	-100.0	0	-100.0	0	-100.0	-	-
	50-100만원	2185	69.9	436	46.8	164	40.2	37.6	-1.8
	100-150만원	2345	63.9	2363	22.6	595	14.6	25.2	-1.8
	150-200만원	2104	29.8	1766	10.0	579	64.0	32.8	10.8
	200-250만원	482	225.7	688	11.5	333	51.3	33.9	8.9
	250만원 이상	138	30.2	622	5.6	215	28.7	34.6	6.2
	불류불능	0	-	0	-100.0	0	-	-	-

주 : 1) 남녀고용평등법상 모집과 채용에 있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므로 성별 구인인원은 제시되지 못함
2) 취업건수는 구직자 정보를 기준으로 함
3) 취업률= 취업건수/ 신규구직자수*100
4) 분류불능 항목의 값은 제외. 각 항목의 합이 전체 값과 상이할 수 있음
5) 종사상 지위별 취업률은 '관계없음' 항목으로 인해 정확한 값을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제시하지 않음

▌ 직업분류별 구인, 구직, 취업

<표 8> 2009년 11월 워크넷 직업분류별 구인, 구직, 취업

(단위 : 명, 건, %, %p, 전년동월대비)

직업 중분류 \ 세부항목	구인인원		구직자수		취업건수		취업률(%)	
	2009년 11월	증감률 (%)	2009년 11월	증감률 (%)	2009년 11월	증감률 (%)	2009년 11월	증감 (%p)
전체	7254	57.9	5875	16.6	1786	36.2	30.4	4.4
관리직	187	2237.5	251	248.6	78	680.0	31.1	17.2
경영,회계,사무 관련 전문직	715	78.3	1732	23.0	483	30.2	27.9	1.5
금융보험관련직	30	1400.0	35	29.6	8	100.0	22.9	8.0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49	4.3	120	96.7	23	53.3	19.2	-5.4
법률,경찰,소방,교도관련직	14	75.0	20	33.3	3	200.0	15.0	8.3
보건,의료 관련직	98	-91.0	198	11.9	75	42.2	37.9	-2.8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89	93.5	129	50.0	48	200.0	37.2	18.6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62	37.8	149	67.4	36	100.0	24.2	3.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226	258.7	275	3.4	102	45.7	37.1	10.8
영업원 및 판매 관련직	300	368.8	154	-3.1	33	-42.1	21.4	-14.4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09	32.9	316	5.0	81	44.6	25.6	7.0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32	190.9	64	36.2	18	100.0	28.1	9.0
음식서비스 관련직	185	88.8	226	75.2	34	54.5	15.0	-2.0
건설 관련직	450	248.8	430	30.3	134	65.4	31.2	6.6
기계 관련직	1038	116.3	341	-15.4	160	45.5	46.9	19.6
재료 관련직(금속,,유리,점토,시멘트)	408	50.6	106	2.9	61	90.6	57.5	26.5
화학 관련직	334	40.9	41	20.6	12	-29.4	29.3	-20.7
섬유 및 의복 관련직	100	222.6	15	50.0	3	0.0	20.0	-10.0
전기,전자 관련직	825	238.1	329	-4.9	156	77.3	47.4	22.0
정보통신관련직	62	342.9	109	25.3	26	52.9	23.9	4.3
식품가공관련직	161	30.9	71	144.8	13	-13.3	18.3	-33.4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1549	66.2	581	-22.5	181	16.8	31.2	10.5
농림어업 관련직	231	35.9	183	64.9	18	-75.0	9.8	-55.0
군인	0	-	0	-	0	-	-	-

○ 산업별 구인은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이 1,54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계 관련직(1,038명), 전지,전자 관련직(825), 경영,회계,사무 관련 전문직(71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산업별 구인 증감률은 관리직과 금융보험관련직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나, 보건, 의료 관련직은 감소하였음

○ 구직자수는 경영,회계,사무 관련 전문직이 1,7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직과 식품가공관련직이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하였음

○ 기계 관련직, 전기전자관련직,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은 구인인력은 많은 반면, 구직자수가 전년동월대비 크게 감소하여 인력수급에 애로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취업건수는 경영,회계,사무 관련 전문직이 가장 많았으며, 영업원 및 판매 관련직, 화학 관련직, 농림어업 관련직의 취업건수와 취업률은 전년동월대비 크게 감소

▌ 산업별 신규구인

<표 9> 2009년 11월 워크넷 산업별 신규구인

(단위 : 명, 건, %, %p, 전년동월대비)

세부항목 / 직업 중분류	2008년 11월	2009년 11월	증감률(%)
전체	4593	7254	57.9
농업,입업 및 어업	182	274	50.5
광업	0	8	-
제조업	2509	3997	59.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	10	900.0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9	60	106.9
건설업	147	474	222.4
도매 및 소매업	88	401	355.7
운수업	16	123	668.8
숙박 및 음식점업	96	197	105.2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6	253	622.9
금융 및 보험업	5	35	60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	61	408.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0	166	232.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23	644	423.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6	26	0.0
교육 서비스업	96	82	-1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22	198	-82.4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	14	366.7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1	229	349.0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3	2	-33.3
국제 및 외국기관	0	0	-

○ 산업별 구인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3,99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644명), 건설업(474명), 도매 및 소매업(40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과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이 전년동월대비 구인인원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교육 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다소 감소하였음

Ⅲ. 국내외 고용정책 동향 및 시사점

1. 고용과 일자리의 개념정의

○ 고용(雇用, employment)은 고용되는 자(근로자·피용자)가 고용하는 자(사용자·고용주)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고용하는 사람이 그 노무에 대하여 보수(報酬 : 임금)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표 10> 경제활동인구조사 임금근로자 구분

구 분	내 용
상용직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초과)인 정규직원 –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 – 회사의 소정 채용절차에 의하여 입사하고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는 사원 –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퇴직금 및 상여금 등 각종 수당 수혜자 – 채용절차에 따라 입사하였더라도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소요되는 기간 또는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자와, 몇 년을 동일사업체에 계속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이 임시 또는 일용인 자는 상용직에서 제외
임시직	· 임근근로자 중 상용이 아닌 자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 일정한 사업완료의 필요에 의하여 1년 미만으로 고용된 자 – 단순 업무보조원으로 상여금 등 제수당을 받지 못하는 자 –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도 퇴직금 비수혜자는 임시직으로 간주
일용직	· 임금근로자 중 상용 및 임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 – 일정한 장소 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정의

○ 직업(職業, 일자리)은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는 일을 말함

- 비경제인구로 구분되는 성직자처럼 생계유지가 아닌,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도 존재
-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으로 구분

<표 11> 비정규 근로자 범위의 범위[3)]

구 분	내 용
비정규직근로자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한시적근로자 ②시간제근로자 ③비전형근로자 등으로 분류된다.
한시적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근로자)를 포함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가 해당됨
비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일의 완료, 이전 근무자 복귀, 계절근무 등)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비전형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파견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용역근로자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
가정내근로자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닌 가정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근무 형태
일일(단기)근로자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3) 비정규 근로자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제1차), 2002. 7. 22

2. 각 부처별 고용정책 방향 및 대책

<표 12> 2010 부처별 일자리 정책 및 추진계획 요약

부서	정책	추진계획
기획재정부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력 회복	–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 [국가고용전략회의]설치,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지식경제부	– 실물경제의 활력회복을 통한 투자일자리 창출 확대	– 지역별 특화된 고용확대 방안 마련 – 산학협력의 고용 창출 기능 강화, 지역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 확대, 고용 유인형 산업의 활성화
노동부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기조 확립 – 취업애로계층 일자리 대책 지속추진	– 경제위기 후 고용창출력 회복을 위해 중장기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정책, 제도 등을 일자리 관점에서 분석, 평가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및 뉴스타트 프로젝트 제도 등 개선, 직장보육시설 확충 등 일하는 여성 육아부담 해소, 고용연장 및 전직지원 강화 등 고령자 취업촉진 지원 –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창출 및 고용개발촉진지역의 지정기준 제정
교육과학기술부	– 취약한 청년층 취업여건을 개선하고자 교육과학기술 분야에서 일자리 사업 추진	– BTL 사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교육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사업, 대학생 및 대졸 미취업자 취업 지원을 강화
행정안전부	– 공공부문의 생산적 일자리 조성	– 생산적인 희망근로사업 추진, 다양한 공공 일자리 조성, 정규인력 신규 채용, 일자리 지원체제 구축, 지역 희망일자리 추진단 발족
보건복지가족부	– 한시대책 종류 이후 서민생활 안정 –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위해 일자리 지원 확대 –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 강화	–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민간후원 등으로 최대한 연계·지원 – 사회서비스 등 취약계층 일자리 – 고령화에 대응하여 노인일자리 지원을 강화
여성부	–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추진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 지원 확대	–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 – 유연한 근로가 가능한 '퍼플 잡(Purple Job)[4]' 직종 발굴·확산 – 단시간근로, 탄력근로, 재택근무 등 기업의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분위기 조성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기능 강화 및 인력난 완화 – 창업과 취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한 사업화 촉진을 위해 대학, 연구원, 대학(원)생, 퇴직인력등의 기술창업 지원을 확대 – 교수, 연구원 창업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요건 완화, 실험실창업을 대학기관을 기술창업의 요람화 – 청년기업가정신 확산 및 창업활동 촉진, 편리한 창업환경 조성 – 구인, 구직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북한이탈주민의 중소기업 맞춤형 취업 알선시스템 구축

1) 기획재정부

4) 퍼플 잡(Purple Job) : 정규직으로서 유연한 근무형태를 유지하며 일과 삶(가정)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평등한 가족생활,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일자리로24시간 근무부서(병원 의사, 간호사), 전문 지식·기술분야(번역·통역, 속기), 휴일근무 또는 야간개장 분야 등

▌2009 일자리 상황 평가

- 정부 일자리 대책에 힘입어 고용 소폭 개선

○ 경기침체로 감소하던 취업자수가 희망근로 등 정부 일자리 대책에 힘입어 6월 이후 소폭의 증가세로 전환

- 산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에서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일자리 대책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업은 증가세 유지
- 종사상지위별로는 일용직, 자영업주 등 취약부문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

○ 취업자 감소 및 실업자 증가로 위기 이전에 비해 고용률이 하락하고 실업률은 상승

- 구직활동 포기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실업률 상승폭이 고용률 하락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음

▌2010 고용 전망

- 취업자수 20만명 내외 증가 전망

○ 취업자수는 경기개선에 따른 민간부문 고용창출과 정부의 일자리 사업효과로 20만명 내외 증가할 전망

-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고용 여건도 금년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고용의 경기후행성 및 2009년의 일자리 나누기, 초과근로시간 감소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실물경기보다는 고용회복 속도가 느릴 전망
- 정부의 일자리 사업규모는 2009 추경보다 늦은 수준이나, 예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고용회복이 더딜 가능성에 대비하여 희망근로를 2010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등 일자리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할 예정

○ 고용률은 58.5%, 실업률은 3.5% 내외 전망

- 취업자 증가규모가 충분치 못하여 고용률이 소폭 하락하고, 실업률도 소폭 하락에 그칠 전망

▌2010 일자리 창출 정책

-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설치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

○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

- 경제정책운요d의 최우선 가제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대통령 주재하에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한시적으로 운영
-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전 분야에 걸쳐 장단기 대응방안을 마련

○ 서비스산업 선진화

- 그동안 추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추진대책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
-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 발표하고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
- 고용창출 효과, 성장가능성 등이 높은 유망업종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육성 방안 마련
-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건전한 여가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휴일 제도 개편을 검토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복수노조 및 전임자 급여 관련 법령의 개정 작업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관련제도 개선도 추진
- 일자리 창출과 시장여건 변화에의 탄력적 대응을 위해 근로시간, 임금 등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추진

○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제고

-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과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범정부적 고용전략 수립
- 민간부문의 고용회복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재정의 일자리 지원 지속
- 산학연계형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및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 중소기업 근무유인 제고
- 중소기업 인력난,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합, 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외국인 인력도입, 관리 방안 검토
- 취업 지원 시스템을 강화
- 구직자가 필요한 훈련과정을 스스로 선택, 이용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사업을 대폭 확대

○ 인적자본 확충

-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제고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등학교 체제 개편 추진
- 경쟁, 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한 대학 구조개혁 촉진
- 산업수요에 맞는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산학연계 강화 및 기능인력 양성 지원

○ 투자 확대 및 효율화

- 창업, 입지, 환경 등 전반적인 투자환경을 재점검하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업환경개선대책]수립
- 신성장동력, 녹색성장 등 성장 유망분야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 국가산업발전 전략과 연계된 '선택과 집중'의 외국인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
-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2) 지식경제부

▌2009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실적

새로운 고급 일자리 창출	– 퇴직전문가 개도국 파견 사업 등 신규 고용모델 발굴 – 광역권 선도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지키기, 나누기 지원	– 자동차업종에 고용유지+재훈련 모델 시범도입 추진 – 우리부 및 소관 60여개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 추진
기업에서 원하는 핵심산업인력 양성	– 산업기술, 에너지, 무역, 특허 분야 등 총 55,391명 지원

▌2009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 지식정보보안사업 신규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 국가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인력 양성과 청년 실업난 해소
- 경제위기 극복, 실업난 해소를 위해 편성된 추경사업 중 지식정보보안산업 인력양성에 예산을 확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할 신규인력 채용시, 분야별 무료 교육을 실시 후 해당기업에 1년간 고용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

○ IT중소기업, R&D인력고용촉진사업 추진

- 산학협력을 통해 실무능력을 겸비한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고용연계함으로써 동 분야의 구인난과 구직난을 완화하고 IT중소기업의 연구역량을 강화
- 석사인력 고용을 통한 IT중소기업의 연구역량강화를 위해 선 기업제시 프로젝트의 공동수행, 후 채용지원 혹은 채용보조금 지원을 통한 단순 채용지원 등 2가지 방식으로 추진

▌2010 일자리 창출 정책

○ 산학협력의 고용 창출 기능 강화

- 가족회사 등 산업기술대의 성공적 산학협력 모델을 다른 산업단지로 확산하기 위한 산학융합단지 추진
- 산학협력에 기반한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확대

○ 지역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 확대

- 광역권 선도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중심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브랜드화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근로 환경 및 경쟁력을 제고
- 지방기업고용보조금을 증액하고, 지역간 지원규모 편중 완화 및 투자, 고용보조 확대 방향으로 지방이전보조금 개편

○ 고용 유인형 산업의 활성화

- 노동집약형 산업을 새로운 고용확보 돌파구로 활용하기 위해 숙련집양형 산업으로 고부가가치화
- 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고급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본격화

<표 13> 2010 일자리 창출 관련 과제 실천 계획

1/4분기	지방이전보조금 고시개정, 지방기업고용보조금 확대	1월
	21세기 디자인 전략 수립	2월
	녹색, 신성장 선도인재 확충대책 마련	3월
2/4분기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범사업 추진	4월
	숙련집약형 산업육성대책 수립	6월
3/4분기	이러닝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9월
4/4분기	Fast Track형 산단입주방식 시범도입	10월
	산학융합단지 조성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12월

3) 노동부

▌ 범정부적 국가고용전략 수립 추진계획(안)

- 노동시장의 활력을 회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국가 고용전략을 마련하여 범정부적으로 일관되게 적극적으로 추진

▌ 기본방향

○ 고용친화적 경제·산업정책 추진

- 경제·산업·교육·복지·재정·세제 등 주요 정책 수립·집행시 고용인지적 관점을 견지하는 등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
-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분야(서비스산업 등)의 전략적 활성화, 노동수요의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조합 적극 모색

○ 노동시장의 효율성·공정성 제고

- 여성,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인적자원개발시스템 혁신, 매칭기능 강화 등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
- 고용친화적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청년·근로빈곤층·여성·베이비붐 세대 등 4대 취업애로계층의 취업지원 강화
- 노동투입의 증가가 잠재성장률 제고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고용 확대로 연계될 수 있는 정책조합 발굴

▌ 주요 검토과제

○ 노동수요 측면

- (고용영향평가 등) 경제·산업·교육·복지·재정·세제 등 주요 정책·제도·사업을 고용의 관점에서 분석·평가·개편
- (투자 활성화)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조세·금융제도 개선
- (서비스 산업 육성)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금융업·지식기반서비스산업·일자리 중개산업 등 육성 등
- (내부노동시장 유연화) 과도 또는 과소한 노동규제 정비, 고용친화적 임금교섭체계 구축, 임금·근로시간 조정, 배치전환, 다양한 고용형태 활성화 등 작업장 혁신 추진 등
- (공정거래관행 정착)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제약하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등

○ 노동공급 측면

-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확대) 상용형 시간제 근로 활성화 등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 (교육 개혁) 전문계고 및 대학의 구조조정 가속화 등
- (능력개발투자 확대)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취약계층 맞춤훈련·산학연계형 훈련 확대, 인적자원개발시장 활성화 등
- (일자리중개시스템 효율화) 중앙-지방-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한 일자리 중개시스템 효율성 제고
- (사회안전망 확충) 사각지대 해소, 일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회안전망 재설계 등
-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 근로빈곤층, 경력단절여성, 베이비 붐 세대 등
- (고령사회 대비) 임금피크제 활성화, 정년 연장 공론화 추진 등

▌ 추진체계

○ [국가고용전략 준비팀] 구성·운영

-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학계 및 현장전문가로 국가고용전략 준비팀을 구성하여 전문적 검토 및 각계 의견을 수렴
- 준비팀 검토결과를 토대로 고용정책심의회 논의를 거쳐 국가고용전략(안) 마련

○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과 연계

- 상반기중 논의된 일자리 관련 정책은 국가고용전략에 반영
- 고용정책심의회 논의를 통하여 마련한 국가고용전략(안)은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 논의를 통하여 확정·발표

▌추진일정

○ 국가고용전략 초안 마련 : ‘10.5월말까지

- 국가고용전략 준비팀 구성(‘10.1.6) 및 월 1회 이상 논의를 통하여 5월말까지 국가고용전략 초안 마련

○ 국가고용전략 확정 및 발표 : ‘10.6월말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가고용전략(안)을 마련하고,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하여 확정·발표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창출

○ 녹색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 [녹색인력수급전망]과 [고용영향평가제도]를 도입, 녹색산업분야에서 인력의 과부족 현황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처간, 중앙-지방, 민-관, 노-사 등의 녹색일자리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산업현장의 수요변화에 대응한 인력공급을 추진할 계획
- 녹색일자리 취업지원을 위하 온라인 워크넷(work.go.kr)의 일자리 정보에 녹색일자리를 표시하여 구직자들에게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하며,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하 [녹색사회적기업] 300개를 육성하고 산림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에서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계획

- 기업의 작업장을 녹색근무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10대 화학물질 사업장을 3단계 관리체계(녹색사업장, 황색사업장, 적색사업장)로 구축하여 [녹색사업장]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원격근무 등 에너지 절감형 근무형태 확산을 통해 환경친화적 고용을 활성화할 계획

○ 녹색 직업능력개발 확대

-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력수요가 급증하는 신재생에너지, LED·지능형전력망, 친환경 건축 등 분야별로 특화된 직업훈련센터 지원을 통한 기능인력 공급을 확대
- 자동차·철강·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의 녹색화 진전에 따른 녹색 근로자 전환 훈련체제를 구축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게 훈련비와 임금을 지원. 특히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등이 녹색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Green skill alliance)을 구성하여 녹색기술 특화훈련을 실시할 경우 시설·장비비, 전담인력 인건비 등 우선 지원
- 녹색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기존 국가기술자격의 녹색화도 강화

○ 핵심녹색인재 10만명 양성

- 고급 핵심 녹색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별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12년까지 13개의 녹색 [전문대학원]을 지원하고 녹색기술 관련 [특성화대학원] 선정·지원을 강화
-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녹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 및 WCI(World Class Institute)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
- 지역 녹색인재 공급을 위해 [광역경제권 신성장 선도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비수도권 6개 광역 내 19개 우수 지방대학을 녹색교육기관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
- 녹색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녹색금융, 녹색경영, 탄소배출권 거래 등 녹색서비스분야 전문인력 양성 강화
- 녹색기능 인력을 제계적 양성하기 위해 전문계고에 다양한 직업교육 트랙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마이스터고(21개)의 녹색전문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

○ 녹색성장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 기존 녹색직업의 고용 수요를 증가시켜 일자리 증가
- 기존 직업의 수행직무, 기술·지식 등을 변화
- 녹색분야에서 새로운 직업을 창출
- 비녹색산업의 규제·퇴출에 따른 기존 직업의 대체 또는 소멸

○ 유망 녹색 일자리

- 에너지원 분야: 태양광설비시스템 개발, 연료전지시스템 설치
- 에너지 고효율화 분야: LED 생산 관리, 전력 IT 연구, 석탄액화기술 연구
- 산업·공간의 녹색화 분야: 그린카 설계, 생태도시 개발, 교통수잔 경로기획
- 환경보호·자원순환 분야: 기후변화 대응 분석, 정밀농업
- 저탄소 경제활동 지원분야: 탄소거래중개, 환경경영컨설팅, 녹색프로젝트 파이낸스

▌고용개발촉진지역의 지정기준 제정

-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가 지정지역에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면서 3개월 이상 거주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지원금으로 근로자 임금의 1/2(대규모기업 1/3)을 1년간 신규로 지원
  · 실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전직지원장려금도 현재 대규모기업에게 2/3를 지원하던 것을 90%로 대폭 확대지원하고, 1명당 최고액도 3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인상지원
-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 및 수당의 90%를 지원
- 또한, 노동부장관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사업비를 우선 지원
  ·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우선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4) 교육과학기술부

▌BTL 사업

-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긴요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을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이 시설편익을 조기에 향유할 수 있도록 함
  - · 매년 예산을 확보해 시설투자하는 방식은 국민이 원하는 시설을 적기에 제공하기 어려움
- 건설부문 일감부족을 해소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깨끗한 학교 만들기사업(사회적 일자리 창출)

- 2008년도 신규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특수 및 국립초등학교에서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한 청소 용역사업 추진
- 학생 및 교육지원의 건강증진·보호에 기여하고,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
- 소요예산: 150백만원

▌2010년 교육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 과제

- 취약한 청년층 취업여건을 개선하고자 교육과학기술 분야에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 약 7만 3천개 일자리가 생길 전망

<표 14> 교육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사업

① 청년인턴 채용 (1,541개)	– 교과부 행정인턴십 : 160명 – 시·도교육청 행정인턴십 : 639명 – 출연연구기관 인턴연구원 : 742명
②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사업 (53,329개)	–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 : 2,000명 –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 7,000명 – 초·중·고 학습보조인력 : 20,121명 – 방과후학교 관련 : 7,717명 – 종일제 유치원 보조인력 사업 : 5,500명 – 특수교육보조원 사업 : 5,001명 – 국립특수학교 종일반 운영지원 사업 : 20명 –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 5,970명
③ 취업연계형 사업 (18,611개)	–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취업연계형 사업 : 1,900명 – 미취업 대졸생 지원 사업 : 10,400명 –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 1,820명 –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 사업 : 50명 – 대학생 해외봉사활동 지원 사업 : 2,300명 – 학문후속세대양성 사업 : 701명 – 한·미 연수취업(WEST) 사업 : 340명 – 전문대학생 및 대학생 해외인턴십 : 1,100명

○ 대학생 및 대졸 미취업자 취업 지원 강화

- 관련 부처 합동으로 청년 DB 80만명의 정보를 구축하여 입력된 정보를 기초로 맞춤형 구직 및 훈련 정보를 제공
- 재학생에게 산학연계형 직업·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을 확대(32개 대학 → '11년까지 42개 대학)
- 미취업 대졸자에게 맞춤형 연수를 제공하는 전문기술연수 사업을 실시

5) 행정안전부

▌2010 일자리 창출 정책

- 공공부문의 생산적 일자리 조성

○ 생산적인 희망근로사업 추진: 10만명

- 저소득층 복지대책에서 실업대책으로 전환
- '친서민, 생산적 10대 사업' 집중 추진

- 안정적 일자리 창출 병행
- Post-희망근로대책으로 [지역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추진

○ 다양한 공공 일자리 조성: 4개 분야
- 행정인턴
- IT 부문 일자리
- 재해예방부문 일자리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 정규인력 신규채용
- 공공부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감축기조는 유지하되, 청년 실업 등을 감안하여 필수분야 최소인력 채용

○ 일자리 지원체제 구축
-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기업·대학과 협력하여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 '일자리 전략회의'(행안부-자치단체) 개최, 추진상황 점검(월 1회)
- 자치단체 일자리 조성실적을 평가, 우수 자치단체 지원

▌2010 지역 희망일자리 추진단 발족
- 1조 8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역 일자리 사업에 집중 투입하여 16만개 일자리 제공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30,000명(3,000억원)
-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신규 시범사업
- 지역향토자원조사 및 DB 구축, 사회복지 도우미, 사회안전지킴이, GRDP 등 지역통계 조사요원, 방과후교사 등

○ 희망근로 사업: 10만명(5,727억원)
- 저소득층 복지대책에서 실업대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10대 생산적, 친서민적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취업과 연계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중점적으로 추진
- Post-희망근로대책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자립적 지역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추진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

○ 행정인턴과 IT 부문일자리 분야에서 청년실업자들에게 내실 있는 일자리 제공

○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 행안부 장관이 주재하고 노동부, 복지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는 [지역일자리 창출 전략회의] 개최
- 노동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추진하는 각종 정부보조 일자리사업에 대해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계 구축

○ 지자체별 맞춤형 취업알선을 위한 [일자리 종합센터] 운영

- 시도 및 주요 시군구에 일자리 종합센터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종합센터] 운영 계획

6) 보건복지가족부

▌2009 일자리 정책 현황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질적 수준 개선

- 경제위기에 대응, 고용창출효과가 큰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대
- 휴폐업자, 실직 임시·일용직 등 위기가구를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연계하도록 사업별 지침 개정
- '07년 전자바우처 도입 이후 적용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현재 8개)하고 『사회서비스이용권관리법 제정안』 국회 제출 ('09.7)
-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해 국가최소품질기준 설정, 인력 선진화 대책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09.12)

○ 저소득가구 창업지원 및 자활지원 확대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자활근로를 대폭 확대하고 맞춤형 자활경로 지원을 위한 자활인큐베이팅 사업 추진
- 지자체 자활기금과 민간재원을 활용, 4개지역(경기, 부산, 인천, 전북)에서 자산형성지원(IDA) 시범사업 추진 ('09.10)
- 저소득 가구에 대한 무담보 소액창업 자금대출(Micro Credit)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추진 인프라 강화

○ 장애인 일자리를 통한 자립 지원

- 장애인복지 일자리, 주민센터 도우미 등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증대

○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 노인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
- 노인생산품 공동브랜드(은모닝) 개발, 일자리 경진대회, 유관 부처협력을 통한 노인일자리 개발 등을 통해 일자리 사업 다양화

▌2010년 일자리 정책

- 보건복지 분야는 고령화 등으로 최근 일자리 창출 규모가 빠르고, 추가 창출 잠재력도 매우 높은 분야
- 그동안 재원투자의 급속한 증가에도 좋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의 정책적 고려는 다소 미흡했으며, 향후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서민생활 보호와 함께 질 높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고려
- 규제완화 등의 제도개선, 신규제도도입, 재정성과 제고 등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 신규 일자리를 15만개 창출

규제완화	– 병의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 – 보건산업 육성 등 기타 시장일자리
신규제도도입 및 확대	– 간병서비스 제도화 등 신규제도 도입 –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재정성과 제고	–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 탈빈곤 일자리 –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 한시생계보호는 폐지하나, 계속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일자리, 민간후원 등으로 연계 지원

- 근로가능 가구는 노인, 장애인 일자리를 우선 연계 지원

○ 보건복지분야 서민 일자리 15만개 창출

- 간병서비스의 단계적 제도화
- 요양 대상자 확대 등으로 약 5만개 일자리 창출
- 보건복지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및 탈빈곤 일자리 내실화
- 보육 등 사회복지시설 인력 증가

-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산업 지원,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한 시장일자리 창출

○ 베이비붐 세대 '계속 근로' 및 '사회참여 활성화' 여건 조성

- 퇴직 후 직능단체, 기업이 한시적으로 회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능 시니어클럽] 확대
- 법률, 의료, 교사 등 전문분야 [은퇴지식인 전문 자원봉사단] 설립 지원
- 산학 연계 은퇴전문교육 실시 및 은퇴이후 재무설계, 건강, 여가 등 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 확대

7) 여성부

▌2009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사업

○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 여성인권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 일자리 창출

- 직업훈련생의 취업지원을 위한 양육지원서비스(18억원)
- 녹색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WE Green 매니저' 운영(6억원)
- 지역 여성을 위한 일자리 지원(7억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탈 성매매 여성 지원 일자리 등(4억원)

▌2010 여성 일자리 창출 정책

○ 여성 일자리 전략적 확대

-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정부지원 여성일자리 점검 및 참여율 확대
- 여성친화적 창업 지원체계 마련(중소기업청 협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일자리 연계 강화

- 직업상담부터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에게 일할 기회 제공
- 구직 및 구인업체 발굴 등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취업설계사 채용인원 확대
-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및 고용촉진 장려를 위해 주부인턴인원 확대
- 방과 후 보육서비스, 밑반찬 구매 지원 등 가사, 육아부담 경감 서비스 제공

8) 중소기업청

- 지역별 대책단을 구성,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완화 및 청년미취업자 등의 취업촉진

○ 주요기능

- 국가고용전략회의 안건 발굴 및 상정
- 중소기업 취업, 고용 관련 규제완화
- 지역별 고용 및 실물부분 동향 파악 및 보고
- 우수 중소기업 발굴, 산학협력협의체 구축, 취업지원관 지정주말·야간대학 운영, 기술사관학교, 취업/창업박람회 개최
- 타부처, BH 등 타 부처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등

▮ 창업과 취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2010년 중점 정책과제 선정)

- 10년간 고용 추이를 살펴볼 때, 중소기업 348만명 증가, 대기업 74만명이 감소하여 중소·벤처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였으며, 중소·벤처붐은 IMF 위기극복에도 기여한 바 있음
- 고용여건은 아직 어렵지만 4차례의 창업·벤처정책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다양한 창업원을 발굴하는 한편, 일자리 미스매치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
- 창업자금지원 18.2조원, 신성장산업육성 투자확대, 1인 창조기업 등 지식서비스창업 촉진 등을 추진
- 현장 맞춤형 기술기능 인력양성(52천명), 우수 중소·벤처기업 정보 DB 구축, 작업환경 및 인식개선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
- 이와 같은 정책추진과 노동부 등 정부내 일자리 관련 부처가 합심 노력하면 제조업 1만개, 서비스업 18만개, 기존의 제조업 빈 일자리를 채워서 1만개 등 내년 한해 중소기업분야에서 2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전망

▮ 청년기업가정신 확산 및 창업활동 촉진

○ 벤처기업인 대학순회 기업가정신 특강(10만명 교육) 및 청년 창업교육 실시

- 벤처창업 붐 조성과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해 성공 벤처기업인(250명)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10만명의 기업가정신 교육 실시
- 스포츠·문화예술 등 창조경영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기업가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TV·신문·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강화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별 수요조사를 통해 관련부처 공동으로 "청소년 직업관 및 창업교육 3개년 계획'을 수립('10.3)
- 청년 CEO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연간 2천명) 지역별 청년 CEO 포럼(50회) 개최, 청년기업인의 애로 발굴 및 해결방안을 마련

○ 교수·연구원·대학생의 창업활동 촉진

- 교수·연구원의 휴·겸직 창업기업을 기업부설연구소의 간이설립 대상에 포함(연구인력 5명 → 2명,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 '10.8월)
- 교수·연구원에게 허용된 실험실공장 설립을 대학(원)생까지 확대(벤처특별법 개정, '10.6월)
- 대학·연구소의 연구성과를 창업과 접목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R&D 중점 지원
- 대학 취업지원센터에 창업전담인력(창업경험자, 창업대학원졸업자, 퇴직금융인 등)을 배치하여 대학생 창업을 현장 지원('10년 69개 대학)

○ 대기업 임직원의 분사창업 제도 개선

- 모기업 공장을 공동 이용하는 분사창업기업에게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요구되는 '공장등록증' 발급 특례('10.6월 창업지원법 개정)
- 분사기업에 현물출자시 과세이연대상 확대(지적재산권 등 모든 자산)

▌편리한 창업환경 조성

○ 집에서 창업을 진행하는 「재택창업시스템」 가동('10.1월)

- 대법원, 국세청 등 6개기관의 전산망을 연결하여 창업 5개 절차, 32개 서류를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 창업소요일수는 14일 → 7일, 방문기관수 7개 → 2개로 줄어드는 등 집에서도 회사설립이 가능해지게 되어 우리나라 창업환경의 세계 20위권 수준으로의 향상을 목표로 지속 추진

<그림 1> 재택창업시스템

- 1인 창조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고학력 전문직, 재택여성, 지역프리랜서 등 새로운 사업영역(디자인, T-스토어 등)을 발굴
- 비즈니스지원센터(26개)를 통해 사업공간, 컨설팅 등 사업활동지원, 아이디어 거래알선(1,200건), 상업화(550건) 및 공동연구(20억원) 등 지원
- 주요 KTX역사에 국민아이디어 상담코너 설치 및 지방대도시에 창조거리 조성(3곳)

▌구인·구직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우수 중소·벤처기업 정보 DB 구축(6만개)

- 청년구직자가 원하는 맞춤형 취업정보 검색 및 사후관리 지원체계 구축
- 워크넷(노동부), 잡월드(기은), 교육·훈련·취업알선기관과 정보 공유
- 『취업 콜센터』 설치 및 상담사 배치(지방중기청), 지자체·노동부 등과 공동으로 취업박람회 개최(11회)

<그림 2> 우수 중소·벤처기업 정보 DB 구축

○ 현장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52천명)

- (기능인력, 전문계고) 맞춤형 인력양성과정(119개교), 전문계고 산학협력 전담조직 설치, 고졸 근로자 주말대학* 운영(지방중기청)
- (전문인력, 전문대·대학) 취업연계 기술인력 양성(20개 전문대) 4년제기술사관학교('11년), 재직근로자 석사과정위탁(10개교, 250명)

○ 미취업자를 기업현장 일자리로 취업유도

- 채용조건에 맞는 직업훈련(최대 5개월)을 거쳐 취업알선(3천명)
- 취업알선 채널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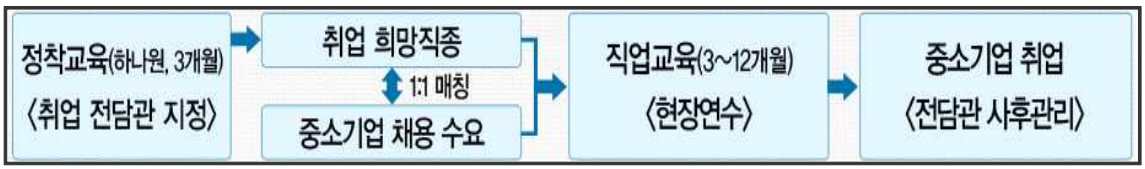
▌ 북한이탈주민의 중소기업 맞춤형 취업 알선시스템 구축

- 국내 유입 북한이탈주인 취업률이 저조하여 현재 취업 희망자가 약 3천명에 이르며,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빈자리를 북한이탈주민으로 우선 충원
- 하나원의 기초직업훈련 과정과 중소기업 채용수요를 연결하여 구직자와 구인기업간 대면을 통해 1:1로 매칭
  · 매칭 후에는 직종별 전문훈련 또는 채용기업의 현장연수를 통해 취업으로 연계

○ 중소기업의 채용수요 조사 및 매칭 주선

- 지방청·중진공을 통해 주물·가구 등 업종별단지 및 농공단지 등을 대상으로 채용수요 조사 실시('10.1월)
- 중소기업중앙회·조합 등을 통한 업종별 채용수요조사(중소기업 인력채용패키지사업 일환, '09.12~'10.1월)
- 중소기업 채용수요 조사 및 매칭 주선시, 외국인근로자 빈자리 채우기를 우선 추진

<그림 3> 맞춤형훈련 및 취업체계



○ 취업자 및 채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취업자) 취업장려금 지원(550~650만원/년), 취업 후 5년간 의료급여 제공, 임대주택 우선 지원
- (채용기업) 고용지원금(통일부, 기시행), 채용기업 금융비용 지원 (1인당 100만원 상당), 정책자금 우대(평가등급 1~2등급 상향)

3. 해외 고용동향 및 정책

1) 일본

(1) 고용정책

○ 경기대책 중 고용대책은 [고용유지대책], [재취업지원대책], [취업내정취소방지대책], [고용보험료 인하], [고용보험 대상 확대] 등 5개 대책으로 구성

- [고용유지대책]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1명당 100만엔을 지원하는 제도 신설
- [재취업지원대책]은 고용창출기금을 설치하여 지장바치단체가 실직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긴급고용창출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의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고용특별교부금]을 신설
- [취업내정취소방지대책]은 입사가 취소된 취업내정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명당 100만엔을 지원하는 제도
- [고용보험료 인하]는 고용보험료의 0.4% 인하
- [고용보험 대상 확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적용범위 확대 및 지급자격요건 완화

○ 지자체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긴급고용대책의 참고사례를 발표

- 고용대책사업례는 돌봄서비스(수발)·육아·의료, 농림수산업, 환경·저탄소 등 10개 분야로 구분하고, 고용대책사업이 신규고용으로 이어지는 약 200개 사례를 제시하여 활용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고용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

(2) 민주당(새 내각)의 고용정책

▌사회안전망 확충 및 강화

○ 국가에 의한 사회안전망 제도가 비정규직의 생활보장 및 재취업지원을 위한 충분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노출

- 파견근로자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의 주된 대상이었으며, 고용보험 등이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연결

○ 장기적으로 장기고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체계 구축, 단기적으로는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파견법 규제 강화 및 직접고용

○ 파견법의 규제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파견법 개정 고려

- 일용 및 스폿(spot) 파견의 원칙적 금지
- 고용기간 2개월 이내의 단기파견에도 해고예정수당이나 사회보험 적용
- 파견근로자에게 마진 비율 등 고용계약 명시
-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을 책임질 것
- 파견근로자와 파견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차별 금지

○ 직접고용 간주 규정 설치

- 위법 파견업자에 의해 파견된 경우와 파견기간이 기간 제한을 초과한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을 통고할 수 있는 규정

▌연령차별 금지 및 최저임금 인상

○ 연령에 관계없이 노동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을 실시할 방침

- 위반할 경우 헬로워크에 의한 지도 및 권고를 받게 하고, 시정을 요구
- 향후 벌칙을 설정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의욕을 가지고 있는 고령자에 대한 고용기회를 늘릴 방침

○ 최저임금을 1,000엔으로 평균 임금의 40%수준까지 향상

- 일본의 평균 임금의 최저입금 수준은 28%로 OECD 평균 38%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경영기반이 열악한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기업 운영에 있어 부담을 느끼게 되는 사항으로 2,000억엔 규모의 중소기업 조성금을 지금하여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

▌고용보험 적용확대 및 직업훈령중 생활지원금 지급

○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피고용자라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사회안전망을 통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정

○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장기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해 직업훈련을 조건으로 생활지원금을 급부하는 제도 창설

2) 영국

○ 소비 감소와 실업 증가의 악순환 극복을 위해 부가가치세 인하

○ 공공사업, 디지털 기술과 환경산업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공공사업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경기 후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건설업체를 지원하고자 학교 보수사업을 시행하여 일자리 창출
-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보다 초고속 광대역망 등 디지털산업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중시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기자동차 개발, 풍력 및 조력발전 등 친환경적인 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

○ 실직자를 위한 직업재활 교육비 지출 확대

○ 정부 인력감축의 일환으로 계획했던 정부 운영 직업소개소 '잡센터 플러스(Job-centre Plus)'의 부분적 폐쇄를 잠정적으로 중단

○ 정부 주도로 공공 및 민간 기업 연계 일자리 창출 유도 방침을 통해 실업자들의 조기취업과 교육훈련 제공을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

- 장기 실업자들을 위한 구직지원 프로그램 '지역 고용파트너십(Local Employment Partnership)' 확대하여 '전국 고용파트너십(National Employment Partnership)' 프로그램 신설
- 정부 주도로 대기업들과 제휴, '잡센터'에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훈련 제공을 위해 공동 노력 합의

3) 미국

○ 경기회복안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구직난 해소와 장기적인 생산성 투자를 통한 경제적 번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주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조세감면을 통한 주로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 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고임금의 일자리 창출

- 사회간접자본 투자(도로·교량 재건 등)와 교육, 의료, 에너지 및 과학기술 분야의 투자 강화
- 신규 건설보다는 노후화된 도로 및 교량 재건, 공공인프라의 에너지 절감 개선투자 지원, 수자원 보호, 홍수방지 및 환경복원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실업보험 및 의료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 실업금여 수혜 기간의 확대 및 실업 금여 증액
- 건강보험 비가입자인 실업자에 대해 의료급여 지원

○ 주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재정부담 완화시켜 공공부문 일자리를 유지하고 주정부의 경기침체에 대응한 정책수립의 탄력성 보장

- 의료급여, 교육재정 등 의무지출 지원 중심
- 주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은 주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감축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

4) 해외 노동시장 트렌드: 활성화(activation) 정책

▮ 개념 및 정의

-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이나, 근로연계 복지 정책(workfare policy)
  - 활성화 정책 프로그램 중 많은 것들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임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특정한 개별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데 반해 활성화 정책은 프로그램을 넘어서 정책의 지향까지 함축
- ○ 국제기구인 OECD에서는 활성화 전략(activation strategy)은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촉진하거나 취업 가능성을 높이도록 촉진하는 것"으로 정의
- ○ "근로능력이 있는 급여 수급자들의 재취업과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급여수급 요건을 바꾸고 각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참여를 의무화 하는 근로연계복지 정책과 근로유인 정책, 사회서비스제공 정책을 포함하는 정책"으로 폭넓게 정의

5) 정책적 시사점 도출

- ○ 경제상황에 적절한 일자리 정책의 목표 정립 및 성과 평가를 통한 재정사업의 유효성 제고
- ○ 지역 상황에 맞는 성장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정부는 정책 자율성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
- ○ 민간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수요맞춤형 인력공급 및 노동수요 창출
- ○ 노동시장이 유연하면서도 고용 안전망을 갖출 수 있는 여건 마련

<표 15> 해외 고용정책 요약

	주요정책수단	주요내용
일본	· 경기부양책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 지자체의 고용기회 확대	– 수발, 의료, 고령자에 대한 보살핌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고용대책 마련 – 「고용대책 사업례」는 수발·육아·의료, 농림수산업, 환경·저탄소 등 10개 분야로 구분하여 고용대책사업이 신규고용으로 이어지는 약 200개의 사례를 제시
영국	· 경기부양책 ·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디지털산업에서의 고용창출 · 공공부문과 민간 기업들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공공사업의 투자를 통해 민간건설업체를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 초고속 광대역망(high-speed broadband)에 투자 – 실업자들의 조기취업과 교육훈련 제공 등을 위해 공공 및 대기업 등과의 민간제휴를 통해 공동 노력
미국	· 사회간접자본 개보수 투자 · 취약계층에 대한 일시적 재정지원 · 주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건설업 부양을 통한 일자리 유지 및 다수의 단기적 일자리 창출 –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푸드스탬프 제공 증가, 실업보험 확대 – 주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유지, 의료·교육 등에 대한 지출삭감 방지, 주정부의 경기침체에 대응한 정책수립의 탄력성 보장

▌활성화 정책 시사점

○ 정책의 포괄적 정의

- 실업자의 취업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활성화 정책의 지향

○ 전달체계 종합

-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는 일자리 정책이나, 자활지원 사업, 직업훈련 등의 전달체계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재편

○ 사회안전망 확충

-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참여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활성화 정책과 실업자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는 정책의 병행 및 추진

Ⅳ. 충남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여성) 일자리 창출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을 제고시키고, 산업수요에 부합한 필요인력을 양성, 공급

○ 주부 및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적응훈련 실시 및 취업지원 강화

- 훈련수료생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도내 기업체 및 유관기관에 일자리제공 협조

○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및 단계적 은퇴 지원, 연령차별금지에 대한 조례 제정

○ 단순기능직종에서 시작한 취약계층의 녹색일자리(폐기물 및 쓰레기 재활용) 근로자들이 지속적인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숙련도를 가진 녹색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 제공

▮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업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

○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육성된 사회적 기업은 경영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 시킬 수 있도록 함

○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법인, 조합, 단체 등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을 사회적기업을 육성 전환 유도

○ 경쟁력 있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

- 경영, 인사·노무, 세무, 회계,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교육·워크숍 지원 및 경영컨설팅이나 제품의 홍보, 마케팅, 영업전략, 품질관리, 경영전략,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한 시장에서 경쟁력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

- 여성직원을 위한 영·유아 보육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에 관심 있는 도내 ○○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화를 유도(병설 사회적 기업 육성)

○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및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식적인 고용의 수요처 개발을 유지되도록 함

- 현재 사회서비스 부문은 상당부분 수요가 미충족된 상태로, 다양한 영역에서 다수의 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상황

○ 사회서비스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저소득계층에게 기초보장을 위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토록 하고, 중산층 이상 계층에서는 잠재수요 및 유효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함

○ 사회서비스사업자의 신규 창출을 확대하고 인력 공급을 늘리는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통해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안정적인 사회서비스 공급과 일자리를 확충해나갈 수 있는 사업기반 마련

○ 사회서비스 고용 실태조사를 통한 실태파악 및 기초자료 DB 구축 추진

-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현장에 적용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용 통계의 축적 및 관리, 정책적 관심이 필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 청년인턴십 운영의 지속화

- 청년층에게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준비된 사회초년생을 양성, 사회조직생활 경험 축적 및 행정업무의 습득을 통해 취업경쟁력을 제고

○ 청년층 실업자의 자활기반 확충 및 생계유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분야 일자리 제공

○ 취업지원의 성격과 경력개발의 실무연수 기능을 병행

○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훈련과 현장체험을 결합하고, 인턴참여기업의 인증제를 통해 인턴운영의 내실화 도모

▌녹색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 신규 녹색산업의 확대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신규 녹색산업의 확산은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단·중기적으로 기존 녹색산업의 확대와 비 녹색산업의 녹색화를 통한 산업의 확산이 필요

○ 에너지 물류서비스 사업 및 저장시설을 건설·운영하여, 에너지 공급을 거점화하고, 관련 물류서비스, 건설고사, 상업적 운영·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수요를

일자리 창출로 연계

○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자립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관련 분야의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에너지 설비 설치를 유도하여 고용 창출로 연계

○ 녹색성장의 일자리 창출

- 기존의 일자리가 '청정', '재생', '지속', '친환경'에 부합하는 녹색일자리로의 전환 유도하고, 환경단체 등과의 녹색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파트너십 강화

○ 녹색산업으로의 투자는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한 직접 투자에만 의존할 수 없으므로 시장기능을 통해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증가하는 유인을 제공

○ 산업연관효과를 고려한 투자의 선택과 집중이 중요

○ 녹색산업과 관련하여 산학연 연계를 통한 기술인력의 양성

▌전략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 디스플레이산업의 우수한 생산기반 및 관련 부품소재, 장비업체가 집적 조성된 충남 서북부권을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 마련

○ 지역 내 전략산업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성장 동력 산업과 산학협력을 증진

- 지역성장 동력 산업의 산학협력을 증진시키고 전문기술인력을 양성
- 취업캠프,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행 기간을 축소
- 지역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전략산업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 인재를 교육하고 양성함으로써 지역 노동시장에서의 미스매치(mismatch)를 해소

○ 사례 : 광양지역 노사정 협의회는 조선산업에 대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광양만권 조선산업 HRD센터'를 설립

- 광양지역은 조선산업과 관련하여 극심한 기능인력 부족현상에 직면해 있으며, 기능인력이 필요함에도 투입가능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
- 특화된 직업훈련을 통하여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광양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조선산업 관련기업에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
- 현장 지향의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을 통하여 지역의 조선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

여할 것으로 전망

- HRD 센터는 재단 및 협의회 등을 주축으로 공공기관 등이 파트너십을 통하여 참여하고 있음

▌신규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창업보육센터 및 기술창업학교를 통해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 및 신규 창업자에게 창업기반을 제공하고, 수료생 기술평가 지원, 창업자금 및 컨설팅 알선·연계로 창업성공률을 제고

○ 도내 대학의 창업동아리 운영 지원, 창업경진대회 개최, 창업스쿨 운영 등 대학생 창업활성화를 지원

- 예비 창업과정 훈련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

○ 예비 기술창업자의 창업준비 활동(창업교육, 시제품개발, 기술지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육성사업 시행

-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창업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 아이템 타당성 검토, 창업절차 대행, 창업공장 설립, 경영기술 지도 등을 지원하는 창업 컨설팅을 통해 창업 촉진 및 창업 초기기업의 지속적 성장 지원

○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의 기출창업 지원을 위해 소요비용의 단계별 지원

- 시장조사, 시제품개발비, 인증 및 출원비용, 사업장 입주비 등

▌LIP(Local Initiatives Program, 주민발의 일자리 창출)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제안 공모제를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주는 방법

- 캐나다(1971~1977)의 경우 '74~'75년 중 4,150건의 프로젝트를 승인하여 31,160개의 일자리를 창출

○ 사업선정 기준의 완화 및 선정 행정절차의 간소화

○ 사업규모 및 지원대상(자격조건), 제안분야 및 방식의 확대

○ 사후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및 우수사업의 정책화

○ 기본 방향

- 공공주도의 일자리 창출에서 민간주도로 전환

-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사업모델 발굴

- 주민참여형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구비

○ 운영방식

step 1	지역공동체(농·어촌 등)에서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
⬇	
step 2	제출된 계획서 심의·선정 후 인력지원
⬇	
step 3	지원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연계지원 서비스 제공

○

○ 지원규모 및 대상

- 지원규모 : 당해년 일자리 창출 전체예산 또는 공공근로 인력 중 일정비율
- 지원대상 : 자영 농축어가, 영농법인, 주민단체 및 조합

○ 지원분야 및 지원방식

- 지원분야 :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분야 및 경제활성화 전 분야
- 지원방식 : 소정 양식에 의한 일자리 창출계획서와 관련서류 on-off line 제출

○ 선정방식 및 지원내용

- 선정기준 : 일자리 창출계획서의 수익성(경제성), 일자리 창출규모 및 지속성, 공공근로 인력투입의 가능성(합법성) 등
- 선정절차 : 서류심사 후 면접 및 현장확인
- 지원내용 : 신규 일자리 임금 또는 공공근로 인력의 일정비율(%)

○ 운영주체 : LIP 추진본부 구성

- 道 및 16개 시군 관련 실과
- 전문가 그룹 구성(교수 +농어촌 단체 +정책실무자 등)

▌중소기업 분야 일자리 창출

○ 위축된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여건을 완화시키기 위한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후, 정규직으로의 채용을 유도

○ 산업체와 실업계 및 전문대를 연계하여 산첩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양성

○ 청년층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한 지역 우량 중소기업의 육성

- 취업정보망을 통한 업체 및 일자리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
- 지역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개선 및 현장연수를 확대